

# ‘UN 세계평화기금 담당자 사칭 사건’ 광주지법서 재판

### 교회 교인 상대로 사기 행각 벌이다 미수에 그쳐

### 일당 3명 중 1명 불구속기소·1명 구속수사중

UN 세계평화기금 담당자를 사칭해 거금을 뜯어 내려간 사기단 재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청에서 열렸다.

이들은 같은 교회 교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이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순천S교회 집사 황 모(6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피고인 측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 진행절차 등에 대해 논의 했다는 것. 황씨는 2018년 1월 같은 교회 장로 박모(68)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UN 세계평화기금 업무담당자로 속이고 수석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황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혼자 재판에 출석 하였으며 기본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한국 유엔평화기금 지원 총 화장이라고 한 신 모씨와 함께 500억 원까지 도움을 줄수 있다며 10억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신 씨가 연락이 끊어지자 또 다른 공범으로 유 모

씨를 끌어들이며 박 씨를 속이기 위한 확인서를 건 낸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 씨는 인적사항 불상으로 가소중지 상태다.

이 사건을 고소한 박 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10억 원을 5억 원 수표 2장으로 준비하라고 한 후 시킨대로 하자 다시 5억 원 수표를 1억 원 짜리 10장으로 갖고 오라고 했다”며 “황 씨 등에게 서울에 있는 사무실 등을 보여 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수상한 점이 계속되어 결국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0억원을 준비하기 위해 1450만 원을 사용하고, 서울을 오가면서 숙박비 등을 포함 2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황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 했으나 담당 판사는 변호인 선임에 제출을 요구 하면서 오는 9월



22일로 다음 재판 기일을 확정했다. 한편 공범인 유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으로 순천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지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 해수부, 전남 완도·경남 통영 고수온주의보 추가 발령

### 액화산소 공급·저층해수공급장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남 완도 내만(득량만 포함)과 경남 통영 내만(진해만 포함) 해역에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고수온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국 연안에 고수온 관심단계가 발령됐고, 이달 14일에는 전남 함평만과 제주 연안에 첫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에 추가로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은 지난 1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완도 내만(완도 군외) 28℃ ▲득량만(고흥 장수) 28.1℃ ▲통영 내만(비산도) 27.0℃ ▲진해만(잠도) 28.5℃ 등이다. 고수온주의보는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전일 수온 대비 3℃ 이상 또는 평년 대비 2℃ 이상의 급격한 수온 변동으로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경우에 발령한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긴 장마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내만 및 연안의 표층 해수염분이 낮아져 표층과 저층의 물이 잘 섞이지 않아 수온이 높아지기 쉬운 조건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운영 중인 권역별 현장 대응반을 통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또 ▲액화산소 공급 ▲저층해수공급장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및 사료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출하 독려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 매년 반복되는 광주천 시설피해

### 물 흐름 막는 인공시설 최소화해야...근본 대책 필요

집중호우로 광주천이 범람 위기까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올해도 천변에 설치한 친수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광주천변 시설물들이 급류에 휩쓸리고 다시 복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8일 광주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주천에 설치한 친수시설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다.

원지교~제2수원지 산책로 800m와 상무대교~원지교 구간 산책로 15m가 유실됐고, 광천1교 징검다리도 급류에 떠내려갔다.

상무교~상무대교 구간 우안 휴안시설 50m도 흔적없이 사라졌고, 곳곳에 설치했던 운동기구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부러지거나 뺏혀 나갔다.

광주천변에 설치한 보안등 117개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광주시는 유실된 산책로에 대해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못쓰게 된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은 철거 조치했다.

이후 복구 등 예산을 확보해 하천 내 친수시설과 하천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천에는 2000년대 초부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들여 각종 친수시설을 설치했으나 여름철 마다 급류에 휩쓸리면서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친수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면 일선 자치단체는 광주천을 생활 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편의 시설 설치 등의 민원을 마냥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유나 기자

## 광주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 ‘시들’

### ‘학파라치’ 활동 미미·자연감소 등 영향

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등 학원의 불법·관법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가 해마다 시들해지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등에 따르면 학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32건에서 2016년 6건으로 크게 줄더니 2017년과 2018년에는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동부교육청 관할인 동·북구가 5년새 12건, 서·남·광산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27건에 달했다.

지금 사례가 적어 불용처리된 예산비율도 2015년 51.4%, 2016년 67.4%, 2019년 84.3%에 달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관련 예산 각각 400만원씩이 100% 불용처리됐다. 신고포상 건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한동안 광주지역 학원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문신고자(일명 학파라치)의 활동이 미미해진데다 신고건수 자체도 해마다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사례가 줄면서 관련 예산도 2015년 1650만원, 2016년 1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이후에는 4년 연속 연간 400만원만 책정됐다.

반면 행정 당국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아 광주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만 2017년 9건이던 위반 사례는 이듬해 23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9년에는 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코로나19 휴원 등에도 불구하고 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민단체는 학원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신고포상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 내 불법 사교육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라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